여성노인 정책의 현황과 방안

성 시 린

목차

1. 들어가는 말

2. 노인인구의 증가와 여성노인

3. 여성노인 문제 현황
- **1)** 경제적 측면
- **2)** 정서적 측면
- **3)** 건강 상태

4. 여성노인복지 정책의 현황
- **1)** 국민연금
- **2)** 생활보호제도
- **3)** 건강보험
- **4)** 가족정책

5. 여성노인복지 정책의 향상 방안

6. 맺는 말

참고문헌

여성 노인 정책의 현황과 방안

1. 들어가는 말

현대사회에서 평균기대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증가된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성비를 보면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훨씬 많고, 고령으로 갈수록 이 성비의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또한 남녀노인간의 평균 수명의 차이로 인해서 여성노인이 홀로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노인이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시기는 평균 10 년 정도이다. 더욱이 여성노인은 우리나라 빈곤계층의 주요 대상자 집단 중의 하나이다. 현재의 여성노인들의 대부분은 직업이 없이 가정주부로서 살아온 경우가 많으므로, 대다수의 여성노인들의 소득보장은 배우자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고령이 되어 배우자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들의 생계보장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소가족화 현상으로 전통사회에서처럼 자녀에게 무조건 의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여성들(여성노인들을 포함하여)은 전통적 가족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현대사회에서의 여성상의 중간에서 갈등의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여성노인들은 본인의 세대에서는 부모를 모시는 의무를 했지만, 현대사회의 변화로 인해 본인의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노후를 의존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의 가치관의 갈등은 여성노인들의 정서적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여성노인 문제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여성노인들의 현황과 그들의 복지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여성학이나 사회학의 사회적 불평등 연구, 사회복지학의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여성노인의 문제는 주변적인 문제로 취급되었을 뿐이었다. 노인문제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인 빈곤문제와 관련하여 공공부조의 대표적 대상자 집단인 노인단독가구의 문제를 종종 지적하면서도 그것이 주로 여성노인의 문제로서 생애를 거쳐 누적되어 온 여성문제의 종합적인 결과라는 인식은 찾아보기 힘들다(박명선,2002). 그러므로, 본 논문의 목적은 여성노인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복지정책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조명함으로써 여성노인이 복지분야의 연구에서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게 하는데 있다. 또한, 여성노인의 현황 및 관련된 정책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여성노인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노인인구의 증가와 여성노인

현대사회의 의료기술의 발달과 경제적 풍요로 인해 평균 기대 수명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1960 년에는 남자 51.1 세, 여자 53.7 세에서 1995 년에는 남자가 69.6 세, 여자가 77.4 세로 연장되었으며(보건복지부, 1998:7) 앞으로는 웬만큼 건강을 유지하는 사

람이면 80 세의 인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는 그 수가 계속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65 세 이상 인구는 1960 년 2.9%에 불과 했으나 1990 년에는 5.1%로 증가 하였고 2000 년에는 7.3%, 2020 년에는 13.2%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1998). 즉,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인구고령화의 기간이 짧으므로 그에 대한 준비가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 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 년, 미국은 75 년, 일본이 26 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2 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조흥식 외, 2000). 현대사회에서 노인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소가족화이다. 소가족화는 노인 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소가족화 현상은 소자녀수와 더불어 핵가족화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부모와 기혼자녀와의 동거가 노인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으나, 최근에는 기혼 자녀와 따로 사는 노인 단독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 노인의 평균수명이 남성노인에 비해 높은 것을 감안하면, 노인 단독 세대의 대다수는 여성 노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점은 노인 인구의 성비의 불균형을 통해서도 추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성비를 보면 1985 년에는 여성 노인 100 명에 대해서 남성노인은 60.7 명에 불과하며, 2000 년에는 55.5%이고, 이 성비의 불균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1998). 즉, 여성노인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 질 것이고 지금도 고령노인의 대부분은 여성노인이다. <표 1>은 연령별 성별 노인인구를 보여주는데, 고령으로 갈수록 여성노인의 비율이 훨씬 높아 짐을 알 수 있다.

<표 1> 연령별 성별 노인인구 (단위 %)

	전체	65 세 이상	75 세 이상	85 세 이상
남자	49.5	38.2	32.0	22.9
여자	51.5	61.8	68.0	77.1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0.

또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평균수명의 차이는 약 8 년 정도이므로 여성노인이 노년기에 혼자될 확률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혼인시 남녀 연령의 차이 및 남녀 노인의 재혼 가능성의 차이로 인해 남녀 노인의 유배우자율도 다르게 나타난다. 남성 노인의 유배우자율은 87.2%이며 여성노인의 유배우자율은 36.3%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29). 그러므로 여성노인은 남성노인과 비교하여 홀로 될 가능성이 더 크고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시기는 평균 10 년 가량 된다. 위의 여러가지 상황들을 감안해보면, 왜 여성노인 문제가 여성정책의 중요한 한 부문으로서 다루어져야 하는지 알 수 있고, 이 점들은 앞으로 전개될 여성 노인 문제의 현황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 질 것이다.

3. 여성 노인 문제 현황

1) 경제적 측면

우리나라의 빈곤계층의 주요 대상자중의 하나는 노인 집단으로, 전국 생활보호대상자중 노인 대상자를 보면 65 세 이상이 가구주인 경우가 전체 생활보호대상자 중 25%에 달한다. 특히 거택보호 대상자 중에서는 65 세 이상 노인인구가 생활보호대상자의 50%를 차지한다. 그런데 여성노인의 빈곤문제는 특히 심각하여, 10 명의 여성노인 중 1 명이 빈곤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경희, 1997:46-47). 지금까지 여성노인은 대표적인 빈곤집단이면서도 빈곤연구의 대상으로 주목 받지 못해 왔다. 김영란(1999)은 여성노인의 경제적 궁핍에 대처하기 위해 '빈곤의 여성화'를 구조화하는 복지국가의 가부장제적 성격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노인의 빈곤은 생활보호대상자 집단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60 세 이상 여성노인의 월평균 소득은 1990 년에는 89,000 원으로 남성노인의 월평균 소득인 213,000 원에 비해 41.6%에 불과하여 현저히 낮은 소득을 보이고 있다 (박정은, 1990; 조흥식 외, 2000 에서 재인용). 여성노인의 경제적 수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배우자의 유무로 나타났는데, 무배우자 여성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노인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지금의 여성 노인들은 결혼해서 가정 내 주부의 역할에 충실하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남편에게 의지해 왔으며 자신의 노후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인의 경제적 자립도는 경제활동에의 참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60 세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9 년에 남성 36.6%, 여성 29.4%를 기록하여 1980 년의 남성 45.1%, 여성 17.0%에 비하여 그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노인 취업자 중 많은 인구가 농림 및 어업 등 1 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더욱 열악하여 여성노인의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농림, 어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여성노인의 경우 농업, 단순노무직, 행상의 세가지 직종에 전체 취업 여성노인의 84.2%가 분포되어 있으며, 취업의 동기가 생활 수준의 향상이라기보다는 기본적 생계 유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비해 남성 노인 취업자는 47%가 농림 및 어업 숙련근로자였고, 18.1%가 단순노무직 근로자이며, 9.9%가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로서 위의 세 부문에 종사하는 비율은 75%로, 나머지 남성노인 취업자 25%는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장치기계 조작원 등 보다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개발원, 2000). 또한 여성 노인의 직업 소득 이외의 소득원을 살펴보면 자녀로부터의 의존도가 1990 년 81.7%에서 1998 년 68.6%로 과거에 비해 악간 줄었지만 여전히 자녀의존도가 상당히 높음을 볼 수 있다. 근로소득 이외의 연금, 퇴직금, 이자소득에서도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절반이하로 낮으며,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는 수도 남성 노인들보다 더 많은 점을 볼 때 여성 노인들의 경제상황이 남성노인에 비해 훨씬 열악함을 의미한다(김태현, 1999). 또한 여성은 취업기회와 승진 면에서도 차별을 받으며 동일 노동에서도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성 취업의 특징은 노후의 연금 수급에도 불리하게 작용하여 노동능력이 상

실된 노후에는 빈곤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김인숙 외,1999). 최선화(1999:200-203)에 의하면, 빈곤 여성노인이 되는 원인에 따라 빈곤 여성노인을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제 1 유형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결혼생활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모두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생애주기마다 가난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삶이 누적된 결과로 노후에 빈곤해 질 수 밖에 없게 된 경우이다. 제 2 유형은 결혼관계의 단절로 인해 가난해지게 된 경우이다. 또한 제 3 유형은 노후생계보장을 자녀에게 의존한다는 태도로 무든 자원을 자녀에게 투자했지만 자녀들의 불행과 무능력 및 부재로 인해서 자신들을 위한 노후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이다. 즉 빈곤 여성은 교육기회의 불평등, 결혼상태, 가정 내 권력불평등, 노동시장불평등, 연금제도에서의 불이익 등 모든 측면에서 전 생애에 걸쳐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고 그래서 노년기에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된 것이다.

2) 정서적 측면

● 배우자의 상실

노년기가 진행됨에 따라 노부부들은 배우자의 상실이라는 불안에 직면하게 된다. 사별, 이혼 또는 별거 등이 배우자 상실의 주요 원인들인데,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경우, 배우자 상실의 주된 원인을 일반적으로 노령에 의한 배우자의 사망이라고 볼 수 있다. 노년기의 결혼관계가 붕괴되는 현상은 남녀노인 모두에게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의 평균수명이 길고 재혼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볼 때 배우자의 상실은 여성노인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김태현, 1999; 신혜섭, 1996). <표 2>는 노인의 연령별 결혼상태 분포를 보여주는데, 65-69 세 남자노인은 유배우 상태가 93.9%로 거의 모든 남자노인들은 유배우 상태이나 여자노인은 43.8%만이 유배우 노인으로써 남녀간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다 뚜렷해지는데 70-74 세 남자노인 중 유배우 상태는 86.2%, 여자노인은 27.2%이고, 75 세 이상은 남자노인은 75.1%, 여자노인은 11.6%밖에 되지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남녀간 결혼연령의 차이로 남자노인들이 여자노인보다 연령이 높아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여자노인의 무배우율이 높고, 또한 남자 노인들은 사별한 경우에 재혼율이 높으나 여자노인들의 경우는 사회, 문화적 규범으로 인한 재혼 금기나 재혼기회 부족 등으로 재혼보다는 혼자 남은 생애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표 2> 노인의 연령 및 성별 결혼 상태 분포 (단위 %)

결혼상태	65-69 세		70-74 세		75 세 이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유배우	93.9	43.8	86.2	27.2	75.1	11.6
무배우	6.1	56.2	13.8	72.8	24.9	88.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78)	(524)	(246)	(448)	(250)	(526)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101).

여성노인에게 있어 배우자의 상실은 경제적 박탈감이나 사회관계망의 감소로 인해 사회적 고립을 더욱 촉진시킨다. 또한 배우자를 통해 얻은 정서적 측면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을 통해 완전히 대체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배우자의 상실은 여성노인의 사기나 생활만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배우자의 상실은 남녀노인 모두에게 무력감과 고독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남녀노인 모두에게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 정체감의 측면에 있어서,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남편의 사망으로 기존에 확고하게 자리잡혀 있던 어느 사람의 아내라는 정체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여성노인에게 배우자의 상실은 매우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여성노인은 고령이 될수록 남성노인에 비해 정서적 만족도가 낮으며, 가족내에서의 지위가 약화되면서 이웃과의 상호작용도 줄어들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

● 자녀와의 관계

노년기에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여성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노인이 자녀와 접촉하는 빈도를 살펴보면, 노인의 12.3%가 거의 매일 자녀와 만나고 있으며, 41.8%의 노인이 주 1 회 정도는 자녀와 만나고, 전체노인의 77.3%가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이상은 자녀와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60-69 세가 80.4% 월 1 회 이상 접촉하고 있는데 비하여 70-74 세 연령집단은 76.9%, 75 세 이상 노인은 73.5%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와의 접촉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고령화로 인한 거동불편으로 볼 수 있다(김태현, 1999). 노년기의 사회적 관계는 주로 가족, 특히 자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노부모와 자녀 상호간에 애정을 중심으로 관계의 질을 형성하는 것은 노년기의 생활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원만한 관계형성을 어렵게 하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세대차이와 의존성, 그리고 고부간의 갈등 등이 중요한 원인들이다. 먼저, 세대차이는 흔히 노인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다른 의견이나 가치관, 태도, 행동, 사고방식등을 말한다.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와 자녀라는 생물학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있는 인간관계이므로, 적어도 20 년 이상의 연령간격 및 사회적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는 이 두세대의 사상이나 가치, 추구하는 바, 취미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권위 등에서 좁혀질 수 없는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세대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차이는 노부모와 자녀가 비록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깊이 이해하고 염려를 해 준다 하더라도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두번째로, 노부모 성인자녀의 갈등은 노인의 의존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의존은 모든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간은 유아기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인 성인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의존을 경험하게 되는데, 노년기는 비교적 다른 시기에 비해 절대적 의존기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노부모의 의존이 높고, 성인자녀의 지원과 도움이 많을수록 부모 자녀간에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부모의 건강이 좋기 않거나, 경제적으로 빈곤할 때에는 자녀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하는데, 이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갈등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까지 자녀에게 물질적 원조의 제공자로서, 권위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노년기에 물질적, 정신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이 적응하기 어렵게 할 수 도 있다. 성인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느낄 수 있는데, 노부모의 부양은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인 면에서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평균수명이 남성노인보다 길기 때문에 고령 노인이 많고, 고령이 될 경우 질병유발의 가능성이 더 높아 자녀에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빈곤한 여성노인이 남성노인의 수보다 많으므로 여성노인이 자식에게 의존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에 있어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고부관계이다. 전통사회에서 고부관계의 성격은 시어머니의 요구나 간섭, 지시 등에 대한 며느리의 절대적인 복종과 인내로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관계였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족은 부계가족으로 가부장을 중심으로 다른 어떤 가족 관계보다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부자관계를 중요시하였다. 며느리는 이 부계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가족 내에서 가장 아래의 지위를 차지하는데 이런 최저 위치는 권리보다는 의무가 많고,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 받는 위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며느리의 지위는 아들을 출산함으로써 가계계승에 공헌이 있을 때 확고해진다. 즉, 아들의 출산은 며느리의 1 차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되므로, 아들은 어머니의 심리적 고충을 덜어주는 방패가 된다. 이때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은 남다른 것이 되며, 밀착된 모자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모자간의 밀착은 젊은 부부가 안정된 부부관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능동적인 고부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한다(김태현,1999).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서 고부관계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가부장적 가족제도에서 아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선호, 확고히 확립되지 못한 부부 관계로 인하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고부간의 갈등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갈등의 양상을 달리하면서 나타나는데, 서구의 핵가족 이념과 전통사회의 가족이념이 공존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과도기적 혼란에서 오는 갈등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고부간의 갈등은 심하지만, 시어머니의 절대적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고 인내하던 전통적 며느리의 상은 변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여성노인들은 이 과도기에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과거의 본인들이 시어머니를 대하던 태도와 본인들의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자신에게 대하는 태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신혜섭(1996)에 의하면 현재의 노인세대는 자신의 부모를 모시는 의무는 했으나 자신들의 노후는 자녀에게 의존할 수 없게 되어 불만과 소외감을 갖고 있다. 특히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이며 자녀에 대해 간한 정서적 결속감은 갖고 있고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서 보다 의족적이며 불리한 입장에 있는 여성노인은 과거의 관습에 따라 자식에게 효도를 받으려는 기대치가 높은데 비해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여성노인의 정서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3) 건강상태

일반적으로 노년기에는 당뇨, 관절통, 고혈압 등의 만성 성인 질환과 퇴행성 변화로 인한 시력감퇴, 청력감퇴, 치아 손상, 거동불편 등 일상 생활 장애로 사고 발생율이 높아진다. 이러한 노년기의 건강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며,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노인과 살아온 생활이 다르고, 여성생리적 조건에 따른 여성 특유의 건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양상이 다를 수 있다. 박정은(1990)에 의하면, 여성은 연령증가와 더불어 남성보다 높은 골다공증, 신경통, 여성생리관련암, 심장질환, 혈압문제, 당뇨, 안과적 질환 외에도 정신병적 우울반응이 높게 나타난다. 여성노인들은 남성노인들보다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혼자사는 여성노인이 많고 자녀의존적이며,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다수가 의료보호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의료보호대상자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어서 여성노인의 경우 의료의 질이 매우 낮을 수 밖에 없다. 노인인구중 86.7%가 만성질환을 한가지 이상 앓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노인의 유병율이 92.2%로 남성노인의 77.4%에 비해 높은 만성질환 유병율을 보이고 있다(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998). 여성은 자녀의 출산과 육아 및 가사노동으로 인하여 여성특유의 건강문제를 지니며 이러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중요시 되지 못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있어 약간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여성노인은 48.2%인 반면 남성노인은 그 절반에 불과한 23.7%이다. 또한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비율이 80.6%에 달하고 있어서 전체 여성노인의 절대 다수가 만성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치매발병율도 여성노인(1.3%)이 남성노인(1.5%)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4). 치매 발생율은 아직은 비교적 낮지만 고령화에 따라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은 건강을 상실했을 경우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수발자에게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수발자가 누구인가에 남녀간 차이가 있는데, 남성노인은 수발자로 배우자를 가장 많이 들고 있고 그 다음이 장남 부부인 데 비하여, 여성노인은 장남 부부, 배우자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경우 남성노인의 수발은 거의 대부분 배우자인 여성노인이 담당하고 있지만 여성노인은 사별 후 고령이 되어 건강이 악화 되었을 때는 이들의 수발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은 병간호와 일상 생활을 돌보아 주는 가족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소자녀수의 경향이 계속되는 등의 경향을 볼 때 고령이 된 여성노인이 홀로 사는 기간이 더욱 늘어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쇠약한 여성노인의 장기적인 보호를 어떻게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분담할 것인가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 중의 하나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노인은 남성노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균수명이 길고 유배우자율이 낮고 재혼율도 남성노인보다 낮다. 여성노인은 경제활동에의 참여도 낮고,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도 낮게 평가하고 있음으로 해서 거의 전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거나, 남편이 없으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여성노인의 유병률은 남성노인보다 높고, 만성질환과 합병증이 더 많으며 치매도 더 많다. 또한 여성노인은 정

서적 만족도도 낮고 가족에게 더 의존적이며 사회적으로도 더 고립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이 대체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여성노인의 경우는 경제, 건강, 정서적 측면에 있어서 남성노인보다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여성 노인들의 노년기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그 현황에 대해 살펴본 다음 대안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4. 여성노인 복지 정책의 현황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1960 년대의 선성장 후분배 논리에 의해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잔여적, 시혜적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경향은 여성복지 제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여성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요보호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부녀 복지'의 명칭하에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2000 년 정부의 여성부 설립이후 '성의 주류화'에 대한 전반적인 노력으로 인해 어느 정도 변화되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정부정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었던 이전과 비겨하여 모든 여성 정책에 여성의 동등권을 고려하겠다는 의미로 정부정책의 큰 변화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허욱, 2000). 그러나 여성노인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이나 서비스에 관한 연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1) 국민연금제도

노년기의 경제적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1988 년부터 시행되었고 2010 년경이 되면 본격적인 연금급여가 시작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는 다른 연금법 적용자 외의 18 세 이상 60 세 미만의 남녀 모두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Pascall(1986)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는 다른 어떤 사회정책분야보다 더 직접적으로 가족개념, 즉 여성과 남성, 부양자와 피부양자, 생계유지자와 가정주보라는 대칭적인 범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한다고 한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가족들의 노후 경제적 위치에 기여하는 정도는 남성과 여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여성노인들이 받는 연금혜택을 남성위주의 논의에서 일반적으로 추론할 것이 아니라(남정림, 1992)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98 년에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전체 여성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62.7%의 여성이 일하고 있는 5 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과 영세한 자영업자까지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을 확대하였고 노령연금수급 최소 가입기간을 15 년에서 10 년으로 단축하였으며 5 년 이상 결혼생활을 했을 경우 이혼한 여성에게도 분할 연금 수급권을 부여하는 등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는 본질적으로 취업유무, 소득 수준 및 가입 기간에 따라 운용되는 능력주의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여성이 일생을 통해 경험해 온 성차별적 현실이 급여 수준에 반영되고 있다. 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혹은 은퇴 전 수입 수준이 높을수록 연금 수급권에서 더 유리하게 되어 있다(조흥식 외,2000). 여성노인들의 경우, 본인이 일을 하여 연금수급권을 가지는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편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 파악되어 독자적인 연금수급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된다. 이렇게 되면

남편의 사망시 또는 이혼시에 여성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될 수 있다(김인숙 외,1999).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은 표면적으로는 남녀 평등적이지만 남녀의 취업구조 차이로 인해 국민연금제도의 실제 남녀 가입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여성의 종사비율이 높은 5 인 미만 사업체의 미가입, 여성의 불완전 고용, 여성취업자 중 가족 종사자의 국민연금 미적용 등이 여성의 낮은 가입율을 설명해 줄 수 있다(박영란 외, 2001). 더욱이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독립적인 연금수급 대상요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고(10 년 이하의 가입경력), 독립적인 연금수급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남성에 비하여 가입 기간이 짧고 평균 소득도 낮으므로 소득 대체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으나 절대적인 급여수준에서 여성이 훨씬 더 적은 혜택을 받게 된다. 미망인이 피부양자의 자격으로 받는 유족연금의 경우도 남편이 획득한 연금권의 일부로서 지급되며 그 혜택 수준이 노령연금보다 낮게 책정되어있다. 또한 국민연금법은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강제가입대상으로, 그 이외의 자를 임의가입대상자로 구분하고 있으나 노인여성의 경우 여성의 임금노동기회의 제약으로 인해 사업장 가입자가 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가사노동의 가치불인정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서의 자격도 갖지 못한다. 또한 임의 가입인 경우도 소득, 재산에 근거한 기여금 산출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그 혜택 역시 불리한 입장에 있다(김복규,2001).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65 세 이상 여성노인들은 대부분 직장을 가졌던 사람들보다는 가정주부로 생활해 온 사람들이 더 많으므로 국민연금제도는 현재 65 세 이상인 여성노인들에게는 거의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10 년부터 연금급여가 시작될 것이므로 현재의 여성노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Kwon, 2001; Sung,2002). 이러한 연금제도의 현황은 여성노인들의 자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2) 생활보호제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노인에게 제공되는 생계보호나 급여의 수준은 매우 낮다. 생활보호에도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데 자활기반 조성에 필요한 생업자금의 융자는 남성 세대주가 여성 세대주에 비해 더 많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금액도 더 높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유일하게 여성수혜자가 많은 제도 이지만, 이 법에서 수혜자의 선정을 가구소득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가구 내에서의 노인여성의 처지가 고려되지 않는다.

3) 건강보험

고령자들은 특히 의료적 욕구가 강한 인구층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특별한 의료서비스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은 1983 년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무료건강제도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료체제를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고령자층을 위한 특별한 의료제도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의료보험체제를 유지하면서 고령자의 보건의료를 특별히 배려하기 위해 '노인보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박광준 외,1999:50).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고령자층이 여성인구이고, 이들의 대다수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여성노인에게 건강보험은 매우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전체 적용인구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2000 년 현재 49.4%이다. 이 제도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 여부가 제도의 접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가입자격에 있어서 노동시장내 여성의 지위가 반영되어 여성들은 피보험자의 위치보다는 피부양자에 속하는 수가 많다(박영란,2001). 건강보험의 경우 성별 적용 인구 현황을 보면 직장 의료보험의 여성적용 대상자 중 피보험자는 19.9%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는 피부양자이다. 여성은 직장이 있는 경우에도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직장 의료보험 적용대상 제외자와 같은 단기적, 임시적 및 계약직과 같은 비정규적 유형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역보험자가 될 수 있지만 보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서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조흥식 외, 2000). 또한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의료보호를 받고 있어 기초적인 보건의료는 제공 받고 있으나 여성이 대다수인 고령 노인의 만성적, 퇴행적 건강 문제와 관련된 전문 의료 서비스 및 사후관리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박영란(2001)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가 가부장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 및 남녀관계에 기반한 남성부양자 중심의 제도이며,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여성을 차별하는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보험제도는 임금노동에 따른 가입자격을 기본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남성들에 비해 소외되어 있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과반수 이상은 피부양자의 자격으로 사회보험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나라 4 대 사회보험중의 하나이므로 위의 사항들에 해당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여성노인들은 대부분이 가정주부로 생활해 왔기 때문에 사회보험제도에서 더욱 소외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4) 가족정책

우리나라처럼 가족이 모든 가족 구성원의 복지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사회에서는 가족정책이 매우 중요한 사회정책중의 하나이다. 특히, 고령의 노인들은 자녀와 함께 주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족정책은 노인복지정책을 살펴 볼 때 반드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박광준(1999:51)은 가족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가족정책은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써 가족의 생활부양기능의 유지와 그 기능상실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며, 의존성을 가진 가족성원의 보호와 양육 등으로 인하여 가족기능의 장애가 발생할 때 그 가족을 보조 혹은 대체하여 기능의 회복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가족정책에서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는, 고령자를 보호 혹은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이다. 고령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은 노령수당이 대표적인 제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1998 년부터 저소득층 현 노령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하여 경로연금으로 대체되었다. 경로연금은 기존의 1991 년부터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지급되던 노령수당제도를 흡수, 통합하여 공공부조수급 노령계층에 대한 노령수당의 성격과 노령으로 공적 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현 노령계층을 위한 공적연금의 보완적인 무갹출 연금제도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현행 경로 연금제도는 장기적으로 공공부조 수급 노령계층에 대한 노령수당적 성격은 지속되지만, 공적연금의 보완적인 무갹출연금제도 기능은 국민연금

의 제도성숙에 따라 점차 소멸되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석재은, 2002). 무갹출제 노령복지연금제도를 국민연금제도의 전체 틀 내에 수용한 것은 이 제도가 공적부조라는 굴욕감이 있는 제도로 받아 들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였다. 그러나 이 무갹출제 연금제도가 국민연금제도 내에서 갹출제와 같이 병존하지만, 그 재원의 조달 방식이 전액 국고보조이며, 급여액도 정액제이고, 소득조사가 따른다는 접에서 갹출제 연금제도와는 실질적으로 무관하다는 것이다(이가옥 외, 1997). 단지 두 제도 모두 동일한 전달체계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점만이 같다고 볼 수 있다. 2002 년 현재 경로연금 급여수준은 기초생활보장노인 수급자의 경우 80 세 이상 노인은 5 만원, 65-79 세 노인은 4.5 만원이며, 차상위저소득노인[1] 수급자의 경우에는 3.5 만원, 부부수급시 한쪽 배우자의 경우 25%를 감액한 2.63 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표 3>은 경로연금의 수급자격 기준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저소득노인 수급자로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표 3> 경로연금의 수급자격(2002 년 9 월 기준)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노인
연령기준	65 세 이상	69 세 이상
소득기준	1 인당 34 만 5 천원	1 인당 48 만 1 천원 (도시근로자가구 1 인당 평균소득의 65%)
재산기준	3600 만원 (4 인가구 기준)	5000 만원 (기초보장수급 3-4 인가구 재산기준의 140%)

출처: 석재은(2002) '경로연금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제 71 호, 9 월, p.49

경로연금제도의 중요한 실시 이유 중의 하나는 저소득층의 경우 자신들의 경제적 능력으로는 노부모를 부양하기가 어려워, 노인부양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에서 일정액의 연금을 노인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노부모 부양부담이 경감되어 자녀들의 노부모 부양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연금의 지급금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을 촉진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대부분의 고령노인들이 여성임을 감안할 때 많은 수급자들이 여성노인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성노인들의 경우 며느리와의 고부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의 경로연금의 급여의 수준으로 대부분 자녀에게 의존적인 여성노인들의 위상의 진작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

5.여성노인복지 정책의 향상 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노인은 노인들이 겪는 빈곤, 건강, 소외, 역할 상실의 문제들

[1] 차상위저소득 수급자 선정의 소득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월평균소득액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 인당 월평균소득의 65%이하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2002 년의 경우 적용된 소득기준은 48 만 1 천원으로 2002 년도 최저생계비 34 만 5 천원의 140% 수준이다.

을 여성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겪게 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애에 계속된 성차별적 대우와 의존성이 누적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권주의적 생애주기 시각을 갖고 여성노인의 의존성을 인식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자원에 접근하여 삶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권주의적 생애주의 시각이란 여권주의와 생애주의를 결합한 것인데, 여권주의 시각은 간단히 말해서 여성억압의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이끌어 내는 이론들을 의미한다. 생애주의 시각이란 노년기에 나타나는 생물학적, 생리학, 사회적 및 심리적 측면에서 서로 결합되어 발생하는 인간발달상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이다(Brown, 1995). 생애주기를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생의 사건에서 보면 교육생활, 직업생활, 가족생활로 구성된다(김미혜 외,1997; 조흥식 외,2000).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생의 사건도 사람이 겪게 되는 시기와 그 내용에도 차이가 생기는데, 세대간의 차이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세대간의 차이와 달리 한 시대 내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선자(1996)는 이것을 성별에 따른 차별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즉, 여성의 인생주기별 생애역할은 산 가정의 딸로 출생하여 성장하면서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성차별 속에서 남자형제보다 교육의 기회가 적었고 가정에서 차별을 받으며 성장하여, 결혼 후 부인으로서 남편에게 복종적인 생활을 감수하면서 경제적인 종속관계로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서 자신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면서 시부모 모시면서 며느리로서 고부간에 상하관계에서 봉양하며 생활하다가 60 세가 넘은 노인이 되니 기대했던 자녀들이 효심이 적은 경우에는 단독세대나 독거노인이 된 상태에서 생을 영위하는 노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시각은 여성은 생애주기를 따라 교육, 직업, 가족생활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권주의적 생애주의 시각에서 볼 때, 여성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의 여성노인의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것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일생 동안 받아오는 성차별의 부정적인 결과가 누적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포괄적인 여성복지정책과 서비스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교육, 노동, 가족생활 등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성차별을 방지하여 남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충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남녀평등의 이념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의 개선

소득보장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경로연금의 경우 가구소득을 소득산정의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사실상 재산과 소득의 획득기회가 없는 노인여성은 개인이 빈곤하더라도 대상에 포함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여성친화적으로 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 선정기준을 가구단위에서 개인단위로 전환할 필요성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 연금제도

현 연금제도는 노동의 기회와 재산소유의 기회가 적은 여성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가치인정, 파출부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등과 같은 여성노동의 가치인정작업을 통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김복규,2001). 여성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임신, 출산 및 가사노동에 보조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3) 현재의 여성노인에 대한 보호 강화

여성노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노인질환에 대한 의료보장 및 서비스를 확대하고 여성노인의 사회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여성노인은 그 어떤 집단보다 의존도가 높은 취약 집단임을 감안해서 여성노인의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4) 여성의 가족보호의 사회적 지원

노인을 위한 장기적 보호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면서 여성이 이러한 가족보호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여성의 가족보호의 사회적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안을 제시하였다(조흥식 외, 2001). A) 연금 수급대상 기준 설정에 수발의무 수행을 반영한다. B) 남녀 모두에게 재교육을 통해 수발을 가족 전체의 의무이며 또한 사회적 의무이라는 인식을 증진한다. C) 수발자에 대하여 훈련하고 교육한다. D) 고용주로 하여금 보다 가족친화적이고 가족의 욕구에 반응하는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김태홍(2001)도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친화적인 정책이 여성의 복지 향상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여성노인의 수발자가 주로 여성들이기 때문에 가족보호의 사회적 지원은 여성노인복지의 향상을 위한 단기적인 해결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5) 남녀불평등의 완화와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정책

여성복지의 주요대상자를 요보호대상 여성뿐만 아니라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개념의 '성주류화'된 정책으로의 발전이 요구된다. 여성과 관련된 법들을 계속 개선하고 여성복지 분야의 재정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여성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김미혜(1997)에 의하면 이러한 정책은 교육, 노동 및 가족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한다. 즉, 교육측면에서는 여성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직업교육과 전문적인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직업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과 재훈련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노동분야에서는 남녀의 동등한 고용기회와 승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직장에서 여성의 가족 보호의 의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족 생활측면에서는 보육 및 노인수발과 같은 가족보호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여성의 사회복지 수급권에 반영되어야 한다.

6. 맺는 말

우리나라는 현대사회에 접어들어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 현상은 더욱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로 노인단독가구와 독거노인 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이들의 대부분이 고령의 여성노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전반적으로 가족의 책임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여성노인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자녀세대들의 사고방식의 변화와 핵가족화로 이제 우리나라 사회도 더 이상 노인부양을 가족에게만 전담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제는 여성노인에 대한 국가

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시기이다. 노인복지법을 보면 언제나 '경로효친사상의 강화'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효 사상은 마땅히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덕목 중의 하나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효 사상의 부분만 강조하고, 국가가 노인문제(여성노인문제를 포함하여)를 가족과 개인에게 떠넘기려 한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또한 지금의 여성노인들은 본인들의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가정주부로 생활해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사회보험의 기능이 강하므로, 임금노동을 해오지 않은 여성노인들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이 취업 대신 전업주부의 삶을 택하였을 경우에도 여성이 가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한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Maynard(1999)는 여성노인을 의존적인 집단으로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 정책의 견지에서 볼 때 위반되는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성노인들의 그들의 생애를 살아오면서 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가정에 공헌한 점들을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성노인들을 단순히 국가와 가족들에게 의존하는 존재로만 바라보아서는 안된다. 여성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서는, 현재 임금노동을 하고 있는 직장여성들의 경우에는, 취업기회나 직장에서의 남녀 불평등이 시정되어야 하고, 여성의 취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일 수 있도록 여성의 가사노동과 돌보기 노동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단기간의 전략으로는 현 여성노인들의 보호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여성 노인 복지의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노인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이 전 생애를 통해서 차별을 받아온 것을 인정하고, 전반적인 사회구조와 복지제도에서 여성 차별적인 요소들을 근절해야 한다. 영국의 학자 Jane Lewis(2000)는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는 개개인에게 선택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얼마나 많은 혹은 어느 정도의 선택(choice)을 여성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빈곤한 여성노인들의 경우에는 혼자 살고 싶어도 재정적인 문제로 자녀에게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경우도 많다. 또는 자녀와 함께 살고 싶어도, 자녀들이 함께 살기 싫어하는 경우에 혹은 자녀도 빈곤하여 부모를 책임질 능력이 없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여성노인들은 버려지고 소외된 상태로 자녀의 도움도 국가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불행한 노후를 보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여성노인이 한국복지제도 아래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선택'의 실체이다. 전 생애를 통해서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본인들의 권리조차 한번 떳떳하게 요구해 보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 여성노인들, 이들의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혹은 가족의 문제와 책임만으로 간주하여서는 안되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지금부터라도 하나의 중요한 사회복지문제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복지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미혜 외 (1997) 양성평등이 보장되는 복지사회, 미래인력연구센터.

김복규 (2001) '노인여성의 권리와 복지' <여성정책연구>, 제 4 집, pp.41-75.

김영란 (1999) '여성빈곤과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한국사회학> 33, 가을, pp.551-583.

김인숙 외 (2000) 여성복지론, 나남출판사.

김태현 (1999) '한국의 소외된 여성노인' <노인복지정책연구>, 14 호, pp.63-107.

김태홍 (2001)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남정림 (1992) '국민연금제도와 여성의 노후 빈곤' <여성문제연구>, 9 월, pp.61-81.

박광준 외 (1999) 고령화사회와 노인복지, 세종출판사.

박명선 (2002) '여성노인의 일과 빈곤: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 36 집, 제 2 호, pp.175-204.

박영란 (1999) '노인부양의 현황과 정책과제' <노인복지정책연구>, 14 호, pp.167-204.

박영란 (2001) 사회보험제도의 여성수급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박정은 (1990) '여성노인의 복지 지원을 위한 기초 실태조사' <여성연구> 8(3), pp.27-83.

보건복지부 (1998) 노인복지사업지침.

석재은 (2002) '경로연금제도의 정책과제와 발전 방향' <보건복지포럼>, 제 71 호, 9 월, pp.47-62.

신혜섭 (1996) '21 세기 여성노인복지에 관한 소고', <동덕여성연구>창간호, pp.111-137.

이가옥 외 (1997) 경로연금의 도입과 시행방안, 제 3 회 세계노인의 날 기념세미나, 성공회대학교.

정경희 (1997) '여성노인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13, pp.45-50.

조흥식 외 (2000) 여성복지학, 학지사.

최선화 (1999)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노인의 빈곤원인' <한국가족복지학> 3 호, pp.187-211.

통계청 (1998) 한국통계연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 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2000) 여성통계연보.

Brown, C. (1995) A feminist life span perspective on aging, in Bergh, N. (ed.) *Feminist practice in the 21st century*, NASW Press.

Kwon, H.J. (2001) 'Income transfers to the elderly in Korea and Taiwan' in *Journal of Social Policy*, vol.30, part,1, pp.81-94.

Lewis, J. (2000) 'Work and care: the paid work-unpaid work equation' in Dean., H. Sikes, R. and Woods, R.(eds.), *Social Policy Review 12*, Newcastle, Social Policy Association, pp.48-67.

Maynard, M. (1999) 'What do old women want?' in Walby, S. *New Agendas for Women*, London, Macmillan.

Pascall, G. (1986) *Social Policy: A feminist critique*, London, Routledge.

Sung, S. (2002) Gender Equality in Confucian Welfare Regime?: Women Reconciling Paid and Unpaid Work in Korea, *Ph.D. Thesis*, University of Nottingham.